

❖ 정부시책 ❖

중소거점 기술개발 후보과제 선정

통상산업부는 내년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항공기착륙장치 개발 등 25개 과제를 선정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별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오는 12월 정밀 재심의를 거쳐 '98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게 된다.

연구기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자금으로 지원되고 이중 신규사업으로 확정 발굴되는 10개 내외의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1,500억원(과제별 2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연구개발 3~4년 차부터는 이들 제품의 시제품이 선보이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연구기획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의 특징이 인쇄기계 개발, 고속공작기계 개발 등 일부과제의 경우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일 무역역조가 큰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 성공시 무역역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광응용 디지털 핵심요소기술, In-

telligent PCTV 기술 등 11개과제는 전자관련 응용기술로 이 기술개발과제가 완료되면 최첨단의 전자응용 기기 및 의료용 기기의 독자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고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조용 강재, 연속 주조설비의 설계기술 등 4개과제는 강도·안전성·용접성이 월등히 개선된 소재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항공산업관련 과제인 가스터빈엔진, 착륙장치,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등 3개과제는 항공기 제작기술의 자립을 확보함과 아울러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실리콘 원재·중간체 및 기능성 제품, 석유화학 및 환경촉매 개발, 광학활성 물질의 의약품 중간체 및 원재 생산기술 개발 등 4개과제는 수입원자재를 대체하며 의약품 및 정밀화학제품의 품질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통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중기거점기술개발 연구기획 지원대상 과제는 지난 5월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48개 핵심과제에 대해 기술개

발 성공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를 종합심사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연구기획사업 선정현황 및 주관기관

- 항공기용 엔진(가스터빈)개발 : 항공우주 연구소
- 광응용 디지털 핵심요소기술 개발 : 한국 광학기기협회
- 실리콘 원재 · 중간체 및 기능성제품 개발(경합과제) : 국립기술품질원, 화학연구소
- CATV/CCTV/SCADA용 광 송수신 시스템 개발 : 한국CATV연구조합
- 초고압 전력기기 기술개발 : 한국전기연구소
- 자동화 센서 : 한국센서연구조합
- 소형모터기술 개발 : 전자부품종합기술(연)
- 반도체기반기술 강화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진공산업 핵심요소기술 개발 : 성균관대학교
- 인쇄기계 개발 : 한국기계연구원
- Linear Motor를 위한 고속 동작기계 개발 : NC동작기계연구조합
- 연속주조설비의 설계기술 국산화 : 삼성중공업(주)
- Construction Robot개발 : 생산기술연구원
- 자동차용 경량부품 제조를 위한 반응고성형기술 : 한국기계연구원
- 항공기 착륙장치 개발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 항공우주 연구소
- 차세대 구조용 강재 개발 : 포항종합제철(주)
- 석유화학 및 환경촉매 개발 : 한국화학연구소
- 광학활성물질의 의약품 중간체 및 원재생산 기술개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Intelligent PCTV 기술개발 : 한국영상기기연구조합
- Enterprise Server II 개발(대형컴퓨터사업 후속사업) : 서울대학교
- 전자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보용 화학소재 : 포항공대
- 의료용 CCD/CMOS Image Sensor개발 : (주)대우네티즌
- 차세대 방사선 의료기기 핵심 기술개발 : 한국전기연구소
- 초고자장 핵자기 공명 분광기 개발 : 한국전기연구소

전기용품 형식승인업무 민간이양

전기전자제품의 안전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형식승인제도 관련 업무가 시행된지 24년만에 민간에 이양된다.

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3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검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던 형식승인 업무를 별도의 인증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승인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을 제한하며 안전성에 미달되는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기관 중

심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규제축소와 벌칙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기전자제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사전검사에 치중, 불법제품 유통단속에 한계가 있고 이 제도를 정부가 운영해 외국과의 상호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UL마크, 독일은 GS마크, 영국은 BIS마크 등을 민간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이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 이들나라에 관련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통산부는 형식승인제도를 민간 인증기관에 위임해 운영토록 지난 74년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노넷 시스템 機能 확대

통상산업부가 기업의 정보제공 및 애로타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종합기업서비스센터 및 이노넷(Inno-Net)시

스템에 물류·에너지분야를 추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GDP대비 15.7%에 이르고 에너지의 수급동

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이노넷 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창업·자금·기술·입지·인력·판로·무역 및 투자·기초공업·생활공업 등 9개의 지원분야외에 물류와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분야는 대한상의가, 에너지분야는 에너지관리공단·한전·가스안전공사·유개공 등이 종합기업서비스센터의 총괄기관과 관계기관으로 연계되어 기업의 물류 및 에너지관련 애로사항의 지원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제공에 주력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물류 및 에너지분야별 관계기관 및 전담자 지정 등을 거쳐 이달중 전화·팩스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처리를 시작하고 관련분야 DB구축, 시스템 확장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이노넷을 통해 애로상담·정보제공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세계·환경분야에 대해

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노넷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 개통된 이노넷에 한달간 연인원 총 1만 214명, 1일평균 300여명이 접속·이용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이노넷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이용횟수는 창업이 1,520건으로 가장 많고 자금 1,078건, 기술 1,015건으로 최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무역 및 투자도 652건으로 수출업체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노넷 시스템 등록 이용자의 63%가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26%가 연구원·교수·학생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8 자본재 표준화 규격개발 과제 조사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자본재 표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98년도 표준규격 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97.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자본재 표준화 사업은 기계류·부품·소

재 산업에 대한 생산기반 강화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대일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3차년도인 '98년도에는 사업량의 확대보다는 생산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기술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가 큰 과제선정에 역점을 두고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8년 자본재표준화 규격개발 수요조사 대상은 ▲대일수입 규모가 큰 품목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개발 품목과 기술개발 대

상품품 ▲ISO, IEC 등 국제규격과 부합화가 시급한 품목 ▲우수 국산자본재(EM) 및 신 기술 인증(NT) 품목 ▲기타 자본재 전략품 목 등이다.

韓電, 개발선정품 우선 구매제도 시행

한전의 「개발선정품 우선 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전기업계 기술개발을 가일층 촉진,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전력설비 품질향상에 큰 기여가 예견된다.

한전은 지난해말 개발선정품에 대한 수의 계약 근거(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 세부 추진절차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선정품 우선구매제도는 한전으로부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받은 전력설비 기자재와 발전용부품에 대해 2년간 수의계약 혜택이 주어지는 획기적인 제도로 최초개발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판로가 보장됨으로써 향후 업계 판도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앞으로 업체가 한전의 자금지원

을 받아 개발을 완료했거나 독자적으로 추진 개발된 제품이나 부품을 한전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한전은 관련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2년동안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한전 수요부서가 신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의 경우 신문공고를 통해 업체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최초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부여된다.

한전은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체의 기술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한편 구매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도운용의 효과를 배가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